

한국사회복지학

일반논문

산업재해근로자 노동시장이행의 성격과 영향요인 연구*

배화숙

(부산가톨릭대학교)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재해를 경험한 근로자의 경제활동형태 변동과 그 특성을 기술하고,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이행과 관련하여 산재보상서비스를 비롯한 영향 요인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산재보험패널 1~3차(2013년-2015년) 자료를 활용하여, 요양을 종료한 1,668명의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한 번이라도 원직장 복귀를 경험한 사람은 36.9%, 재취업 경험자는 51.5%, 미취업 경험자는 36.9%였다. 경제활동형태 전이확률은 현재 원직장 복귀자가 다음 기에도 원직장을 유지할 확률은 88.1%, 재취업자의 재취업 유지 확률 88.9%, 미취업자가 다음 기에도 미취업자가 될 확률은 60.0%로 나타났다. 둘째, 경제활동형태 변화에서 재취업 대비 원직장 복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연령, 학력, 요양기간, 현재 업무수행능력, 산재 전 직장규모, 근무기간, 종사상 지위 중 임시직, 일용직 그리고 직업훈련 총 횟수였다. 재취업 대비 미취업을 선택할 확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성별, 연령, 장애등급, 요양기간, 현재 업무수행능력, 산재 전 근로기간, 직업재활서비스 이용 경험이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와 노동시장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논의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산업재해근로자, 노동시장이행, 직업복귀, 직업훈련, 재활서비스

*이 논문은 2016년 부산가톨릭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을 통해 수행된 연구이며, 제3차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2016년)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정·발전시킨 것임.

1. 서론

우리나라의 연도별 산업재해자 수는 2010년 98,645명을 정점으로 가장 많았다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2014년 기준 재해율은 전년도에 비해 0.61%포인트가 감소하여 전체 근로자 만 명당 53명(5.33%)에 이른다(고용노동부, 2016). 그러나 매년 구만 여 건 이상의 재해 건수가 유지되고 있고 무엇보다 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가 매년 2,000명을 넘는 수치는 여전히 놀라운 규모이다. 현대 사회에서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많은 산재 사망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산업재해는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함께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과업은 근로자들이 요양 기간이 종결된 후 다시 일자리로 돌아와 최대한 산재 이전의 삶으로 회복하게 하는 것이다. 산업재해 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에 논의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자신의 본래 일자리로 돌아오는 것, 노동시장 상황과 개인의 업무 수행 능력 등의 조건에 맞추어 적절한 일자리로 옮기는 것, 요양 종결 후 미취업상태로 머문 후 다시 일자리로 진입하는 것은 산업재해 근로자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 보상과 관련해서도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다.

산업재해 후 요양 종결자를 대상으로 한 산재보험패널조사가 2013년부터 3차에 걸쳐 이루어졌다. 원직장 복귀, 재취업, 미취업 등 노동시장이행을 경험할 수 있는 기간으로는 길지 않지만 산업재해를 경험한 조사대상자에게 3년은 일반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시급성과 변동성이 다른 시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사 대상자의 경제활동형태 변화를 기술하고 산재보상서비스 등 다른 요인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향후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근거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산업재해근로자에게 재활서비스는 일자리로 복귀하거나 그 이후 사회생활 적응에도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그중 가장 핵심적인 도구가 직업훈련이다. 그런데 고용회복과 유지를 위한 중요 수단인 직업훈련도 대상자의 숙련정도나 노동시장 환경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를 수 있다. 특히 일반 근로자의 직업훈련과 달리 산업재해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대내외적으로 적절성을 가져야 할 것이며, 직업훈련만으로 노동시장 이행 효과가 없을 경우 그 보완방법을 탐색해야 할 것이다(배화숙, 2015: 92).

산업재해근로자는 요양종료 후 일반 근로자와는 역동성이 다른 시간을 보낸다. 이런 점에서 산재 근로자의 취업, 미취업, 원직복귀, 재취업에서 변화 등 노동시장이행의 과정을 기술하는 것은 산재근로자의 경제활동 변동 속에서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경제활동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인 산재보상 서비스의 내용과 운영방법의 개선 방향을 탐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도 연구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산업재해를 경험한 조사 대상자의 원직장 복귀, 재취업, 미취업 등 경제활동형태의 3년간 변동 상황을 기술하고 변동의 특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둘째, 산재근로

자 회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시장 재진입과 관련하여 산재보상서비스를 비롯한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산업재해근로자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을 위한 논의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1) 산업재해근로자의 노동시장이행

산업재해나 직업병에 관한 사회보험제도는 다른 사회보장 분야와 달리 근로자가 아니라 고용주를 피보험자로 한다. 이 제도는 본래 고용주의 책임을 보장하던 보험에서 기인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피에터스, 2015: 80). 그런 의미에서 산업재해근로자에 대한 대응으로 산재보상서비스만 존재한다면 근로자보다는 고용주의 위험 보장에 멈추게 되는 것이므로, 제도가 최종적으로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상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질적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재활서비스나 일자리 복귀를 위한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보편적 근로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는 '이행노동시장'¹⁾이 활성화된 사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이행노동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 개인의 근로생애는 가능한 단절 없이 연속적이어야 하며, 개인이 마음 놓고 이행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이행 위험 관리가 요구된다(이예린, 2015: 144). 이것은 근로생활에 위협을 받고 있는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내용이다.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 이동은 일반 근로자와 차이점이 크다는 점에서 이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이행 지원이 필요하다. 석상훈(2008)의 연구에서는 정부 정책이 고용불안정을 가져오는 저임금 일자리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초기의 저임금 근로와 실업 경험을 막는 것이 중요한 정책적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초기의 저임금 근로나 실업의 경험은 오랜 기간 동안 개인의 경력과 노동시장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이러한 낙인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산업재해 후 근로자에게 불리한 노동시장이행의 위험을 감소시키도록 첫 직업복귀 지원의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일자리를 이동하거나 재취업하는 등의 과정이 원활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 자체는 사회적 위험으로 볼 수 있는데, 부정적 의미의 이행을 줄이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개인의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과 소득 확보 능력, 즉 취업 능력을 높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지식과 기능·기술을 충진해 주는 교육 훈련이 이행노동시장 관점에서는 더욱 중요해진다(정병석, 2010: 176). 교육 훈련이 생애 전 기간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중요한 전환기를 경험하게 되는 산업재해근로자에게

1) 이행노동시장(transitional labor markets)은 교육과 근로 사이, 임금 근로와 자영업 사이, 실업과 고용 사이, 유급 근로와 무급 근로 혹은 퇴직 사이를 이동하는 개인의 근로 생활의 결정적 분기점에서 제도화된 '다리' 건설을 통해서 유연성과 안정성의 결합을 추구하는 것이다(Schmid, 2006: 2).

더없이 중요한 것이 교육 훈련 지원일 것이다. 효과적인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이상진(2010)은 직업 복귀를 위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마련하고 직업평가, 구직욕구, 직업력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 직종 선택을 체계화하고 수요자 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중소기업 대상 직업훈련 등 맞춤형 훈련 제공으로 취업률, 만족도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재활서비스 즉 직업복귀를 위한 서비스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직업훈련은 노동시장이행에 있어서 중요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직업훈련은 산재로 인해 손실된 노동 생산력을 회복함과 동시에 개인적인 직업경험을 되살려 줌으로써 직업복귀에 대한 욕구를 강화시키고 사회적응자신감을 고취시킨다(이승욱·박혜진, 2007). 직업유지는 산재장애인 개인의 자존감 유지 및 가족 부양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며, 산재장애인 스스로가 직업재활을 통해 자립할 수 있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사회의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최윤영, 2009: 122). 직업재활단계에서 구체적인 직업재활서비스 사업들은 직업재활준비과정, 사업장 내의 직업적응, 원직장 복귀 및 타 직장복귀에 따른 지원, 직업훈련 및 재교육 그리고 직업재활 후의 사후조치 등을 주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최윤영, 2009: 124).

산업재해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 관련 연구들은 직업훈련의 효과를 결정하는 요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의 관점, 직업재활 방향 등에 대한 것이 있다. 박석돈(2011: 5-6)은 독일 사례에 비추어 우리나라 산재장애인의 직업재활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에서 산재장애인은 산재 이전의 취업 경험이 있기에 특정 전문 지식과 기술, 직업인으로서 소양 등을 갖추고 있어 심리적인 갈등을 해소하고 연령, 경제력, 신체장애 정도 등 개인별 특성에 부합되는 적절한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직업 복귀의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산업재해로 장애인이 된 구직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도성화(2014)의 연구 결과는 우리 사회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성과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을 전한다. 산재장애인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일자리 정보, 다양한 직종 확보, 장애를 갖고도 일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 개선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들에게 직업훈련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53.8%가 필요 없다고 응답하였는데 그 이유로 51.7%가 직업훈련의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훈련이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응답하였다. 노동시장 재진입에 핵심적인 직업훈련에 대해 의외로 근로자의 신뢰가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배화숙(2014)의 노동시장이행 요인에 대한 분석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9개 서비스 중 직업복귀와 관련 있는 상담 및 안내, 직업훈련지원, 창업지원 등은 일자리 복귀와 재취업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근로자 대상의 직업훈련이 일자리 복귀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으며 근로자들도 직업훈련의 실효성에 대해 기대하지 않는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2) 산업재해근로자의 직장복귀 요인

산업재해근로자의 노동시장 재진입과 관련한 연구들이 최근에 이르러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산업재해근로자의 직장복귀 요인, 일자리 복귀 형태를 결정하는 요인, 일자리 이동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요양 후 장애 판정자를 대상으로 직업복귀 형태의 결정 요인을 분석한 양재성 외(2012)의 연구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요양기간이 길수록 원직복귀 확률이 낮게 나타났고, 직업복귀에서는 지역별로도 복귀 형태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사례관리의 대상자인 경우 원직복귀보다는 자영업이나 재취업 형태로 복귀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노동시장 재진입에 산재 전 직장규모가 유의미한 요인임을 발견한 연구(박수경, 2012)를 보면, 근로자가 산업재해 당시 근무하고 있던 산업분야는 제조업, 건설업이 가장 비중이 높고, 직종은 기능직과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중이 높았다. 전체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이 산재가 일어난 전체 사업장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는 데 비해, 원직장 복귀는 50인 이상 업체에 근무했던 자가 더 많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한다.

이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 직장복귀 예측 요인 연구(정원미 외, 2003)에서도 여성, 고령자, 짧은 근무기간, 작은 사업장 규모가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일자리로 재진입하였다가 고용이 중단된 이들을 조사한 박은주(2014)의 연구는 재해 이후 취업력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원직장으로 복귀하였다가 고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재해 당시 종사상 지위, 근무기간, 재해 전후 월평균 소득 변화가 영향을 주었다. 타직으로 복귀했다가 고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재해 당시 종사상 지위, 재해 전후 월평균 소득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근로자의 직업재활을 위한 지원에서 관점의 변화를 논의한 MacEachen 외(2012)의 연구는 무능력(disability) 관리 패러다임에서 능력(ability)과 일자리 재진입으로 초점을 옮겨 정책과 프로그램 수행과 같은 환경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한다. 근로자의 개별적 특성을 개선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만큼 근로자 능력이 규정될 수 있는 환경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는(MacEachen et al., 2012: 15) 것이다. 산재근로자는 일시적인 혹은 잠재적인 무능력 상태라는 회색지대에 있다고 보고 근로자가 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재진입에 초점을 두는 것이 직업재활에서 더 효과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

워싱턴주의 직업훈련 시스템에 대한 산재근로자의 의견을 기술한 연구(Sears et al., 2014)와 캐나다 직업 재훈련 시스템을 경험한 공급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수행한 연구(MacEachen et al., 2013: 2174)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한 문제점은 근로자가 취업을 원함에도 훈련 프로그램 선택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것과, 서비스 공급자 중심의 의사결정으로 인해 근로자의 경험과 능력에 부합한 훈련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더 많은 근로자들을 직업훈련에 참여시키기 위해 근로자의 경험, 능력과 한계와 관련하여 근로자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재활서비스 경험이 직장복귀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직업재활서비스와 의료 재활서비스가 직업 및 원직장 복귀에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심리재활서비스는 직장복귀, 원직장 복귀와 부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 현재 심리재활서비스가 직장복귀에 크게 효과적이지 않았다(신혜리·김명일, 2015: 122-124). 이는 산업재해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활서비스 프로그램이 직장복귀에 반드시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따라서 관련 기관에서 직업복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직업재활에 적절한 기능을 할 것이라는 전제를 수정

하게 하고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의 필요성을 보여준다(배화숙, 2015).

선행 연구들은 산업재해근로자의 직업복귀 혹은 노동시장이행과 관련한 요인들을 발견하고 근로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직업훈련과 재활서비스가 일자리 진입에 대한 영향 유무를 보여주면서, 실질적 효과를 만드는 산재보상서비스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 연구에서 주로 횡단적 분석을 통해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발견된 요인들을 그 성격에 따라 산재근로자의 개인적 요인, 산재 전 직장관련 요인, 산재보상서비스 이용 요인으로 묶어 일자리 재진입과 이동 등 노동시장이행에 대하여 이 요인들의 영향력 유무를 파악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이 주로 산업재해근로자의 요양종료 직후의 직장복귀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데 이에 본 연구는 산업재해근로자의 특수성으로 인해 노동시장이행 성격이 다름을 전제하고 종단적 자료를 이용하여 경제활동형태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연구 성과에 덧붙여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원활한 노동시장이행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더 적합한 방법을 찾는 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경제활동형태 변동 상황을 기술하고 이들의 노동시장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산업재해근로자의 노동시장이행의 성격을 분석하고 일자리 복귀, 재취업 등의 노동시장 참여 형태의 변화에 대한 중단분석을 위해 산재보험패널 1차년도(2014년)부터 3차년도(2016년)까지 병합한 패널자료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산재보험패널은 근로복지공단이 주관하여 산업근로자 및 산재보험제도 환경의 특성과 장·단기 변화를 반영하고, 산재보험서비스의 정책욕구, 정책 효과 등의 논의를 위해 구축한 자료이다. 모집단은 2012년 1월에서 12월 동안 요양종결 근로자 82,493명으로, 지역과 장애등급 및 재활서비스 이용여부를 먼저 층화하고 성별, 연령, 요양기간 등을 기준으로 계통추출하여 총 2,000명을 표집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3차례에 걸쳐 1:1 면접 조사 방식으로 조사한 자료이다(근로복지공단, 2016). 5년 단위로 매년 조사를 통해 산재근로자의 일자리와 서비스 필요 욕구 등의 변화 자료로 축적하므로 재화와 노동시장이행 지원에 관심을 둔 본 연구의 목적 달성에 적합한 자료이다.

본 연구는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이행과 재활서비스 욕구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2013년에 요양을 종료하고 조사에 참여한 1차 조사대상자 2,000명 중 2차년도와 3차년도 중 한 번이라도 조사에 불참한 대상자를 제외하여 총 1,668명²⁾ 대상으로 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3개년도 자료를 연결한 5,004개 관측치(balanced panel data)가 분석 대상이 된다.

2) 본 연구가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에 초점을 맞추는 만큼 상대적으로 근로능력이 미약하다고 보는 높은 연령대 근로자를 제외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65세 이상의 경제활동변동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비경제활동으로 이동하기도 하나 많은 비중이 재취업하거나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모두 포함시켜 사용하였다.

설명 변수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근로자의 성별, 연령, 학력, 장애등급, 요양기간, 직무수행 능력 등의 개인 요인과, 산재 전 직장 요인, 재활서비스 이용경험을 선정하였다. 종속변수로서 경제활동상태는 원자료에서 6개로 구분한 것을 4개로 재분류하였다.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절대적 수가 적어 비임금근로자라는 공통점으로 묶어 분류하였다. 그리고 산재근로자는 산업재해로 인해 비경제활동상태가 되었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실업과 비경제활동 상태를 미취업이라는 공통점으로 묶어 분류하였다.³⁾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은 <표 1>과 같다.

본 연구의 주된 자료분석 방법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현황과 경제활동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기술분석과 설명변수의 값에 따라 노동시장 이행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시간에 따른 변화 등을 살펴보기 위한 패널자료화를 위해 개인 식별 기호를 기준변수(panel variable)로 조사 차수를 시간변수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원직장 복귀, 재취업 등 경제활동형태 데이터가 패널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시간변화와 상관없이 개인의 경제활동형태 선택요인을 추정하기 위해 횡단면패널다항로지분석을 이용하였다. 분석을 위해 STATA/SE 14.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표 1>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변수		측정	
설명 변수	산재 근로자 개인 요인	성별 (더미)	남성=1, 여성=0
		연령	2013년-출생년도/2014년-출생년도/2015-출생년도
		학력	최종학력을 교육연수로 변환
		장애등급	1~14등급
		요양기간	1(=3개월 이하)~6(=2년 초과)
		직무수행능력	현재 업무 수행 능력 0(완전상실)~10
	산재전 직장	기업규모	전체 근로자 수
		근로기간	1(=1개월 미만)~14(=20년 이상)
		종사상 지위(더미) 1	상용직=1, 임시직=0
		종사상 지위(더미) 2	상용직=1, 일용직=0
	재활 서비스	재활서비스이용(더미)	재활서비스 이용=1, 이용안함=0
		직업재활서비스이용(더미)	직업재활서비스 이용=1, 이용안함=0
		사회심리재활서비스이용(더미)	사회심리재활서비스 이용=1, 이용안함=0
	직업훈련 횟수	최종 교육훈련 경험 횟수	
종속변수	경제활동상태	원직장 복귀 /임금근로 재취업/비임금근로 재취업/미취업(실업+비경제활동)	

3) 비경제활동인구는 경제활동 의사가 없고 조사 직전 1주일 동안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인구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실업과 구분된다. 그러나 산재보험패널에서 비경제활동인구는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였거나 실업상태에서 비경제활동인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재해를 입기 전까지는 취업한 근로자였다는 것과 산업재해로 인해 비경제활동 상태로 이동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을 실업과 구분한 기준은 조사 직전 구직활동 여부이기 때문에 조사에서는 구직활동 어려움, 희망 일자리 등을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산재근로자의 비경제활동 상태는 잠재적 실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4. 분석 결과

1)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재활서비스 이용경험

산재패널 조사 1~3차에 모두 참여한 패널 개체는 1,668명으로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산재근로자는 남성이 83.3%이고, 50대가 36.2%, 40대 24.9%, 60대 이상이 18.6%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종학력은 고졸이 44.7%, 중졸 19.1%이었다. 산재 전 근로기간은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 33.1%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1개월 미만인 근로자도 31.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산업재해 유형은 사고가 91.7%였다. 요양기간은 3개월 초과~6개월 이하가 41.8%, 6개월 초과~9개월 이하가 23.7%, 2년 초과도 2.6%에 이른다. 장해정도는 10~12등급 41.1%, 13~14등급이 27.7%였고 장해 없음이 17.6%였다.

<표 2> 조사대상자 인구사회학적 상황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성별	남	1,389	83.3	산재유형	사고	1,529	91.7
	여	279	16.7		질병	139	8.3
연령(1차)	20대 이하	98	5.9	장해정도	1-3등급	24	1.4
	30대	241	14.4		4-7등급	70	4.2
	40대	416	24.9		8-9등급	134	8.0
	50대	603	36.2		10-12등급	685	41.1
	60대 이상	310	18.6		13-14등급	462	27.7
최종학력	무학	68	4.1	요양기간	장해 없음	293	17.6
	초졸	276	16.5		3개월 이하	262	15.7
	중졸	318	19.1		3개월 초과-6개월 이하	697	41.8
	고졸	745	44.7		6개월 초과-9개월 이하	396	23.7
근로기간	대졸이상	261	15.6	9개월 초과-1년 이하	140	8.4	
	1개월 미만	528	31.7	1년 이상-2년 이하	130	7.8	
	1개월 이상-1년 미만	553	33.1	2년 초과	43	2.6	
	1년 이상-2년 미만	142	8.5	합계	1,668	100.0	
	2년 이상-5년 미만	182	10.9				
	5년 이상-10년 미만	130	7.8				
10년 이상-	133	8.0					

산재근로자가 산재 이전의 삶의 모습과 질을 회복하는 데 있어 산재보상서비스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다.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 이용여부는 1차에서만 조사되었다. <표 3>을 보면 조사대상자 1,668명 중 재활서비스 이용자는 53.0%이다. 재활서비스 종류별로 살펴보면 직업재활서비스는

15.0%가 이용하여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의료재활서비스는 39.0%, 사회심리재활서비스는 24.2%가 이용하였다. 일자리 재진입을 목표로 하는 산재근로자에게 중요한 서비스가 직업교육 훈련인데 90.6%가 이용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 종결 후 전체 조사 기간인 3년 동안 교육 훈련 경험이 1회인 이가 112명(6.7%), 2회 경험자는 32명(1.9%)에 그쳤다.

<표 3> 재활서비스 이용 여부와 최종 교육훈련 경험 횟수

구분	재활서비스		직업재활서비스		의료재활서비스		사회심리재활 서비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이용	884	53.0	251	15.0	651	39.0	403	24.2
이용안함	784	47.0	1417	85.0	1,017	61.0	1,265	75.8
합계	1,668	100.0	1,668	100.0	1,668	100.0	1,668	100.0
구분			빈도		%		빈도	
요양 종결 후 최종 교육훈련 경험 횟수			0 회	1,511	90.6	3 회	10	.6
			1 회	112	6.7	4 회	2	.1
			2 회	32	1.9	6 회	1	.1
			합계					

2)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이행

산재근로자의 일자리 재진입은 산업재해 보상체계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목표이다. 산재 이전 삶으로 회복하는 정도에 대한 바로미터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산재근로자에게 있어 3년은 산재보상서비스를 이용하고 난 뒤 취업 혹은 미취업으로, 취업이 원직장 복귀인가 혹은 다른 직장으로 재취업인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 일반 근로자들에 비해 노동시장 이동의 역동이 큰 기간이다.

요양종료 후 첫 경제활동 형태를 보여주는 1차 조사(2013년) 자료를 보면 원직장 복귀 35.4%, 재취업 31.4%, 미취업 29.4%이었다. 2015년 시점에서는 미취업자는 19.4%로 감소하나, 원직장 복귀 비중도 29.4%로 6.0%포인트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표 4>에서와 같이 2015년에 재취업은 45.0%로 경제활동 형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표 4> 조사대상자의 경제활동 형태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빈도	%	빈도	%	빈도	%
원직장 복귀	591	35.4	530	31.8	490	29.4
재취업	524	31.4	715	42.9	751	45.0
비임금근로 재취업	62	3.7	96	5.8	103	6.2
미취업	491	29.4	327	19.6	324	19.4
합계	1,668	100.0	1,668	100.0	1,668	100.0

〈표 5〉는 전체 조사기간 중 노동시장 이동 경험 횟수와 아울러 3년간 조사대상자의 경제활동형태의 경험을 보여준다. 산업해제근로자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길지 않은 3년 동안에 경제활동형태 변동 경험자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노동시장이행 빈도를 측정하기 위해 1~3차년도 조사시점에서 일자리 지속여부 질문을 이용하였다. 이전 조사시점에서 근로하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 중 다음 조사시점에서 그만두었다고 응답한 경우 1회 변동한 것으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지난 조사시점에서 미취업이라고 응답한 이들의 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문항 ‘지난 1주일 동안 무엇을 하였는가’를 활용하였다. ‘일하였다’, ‘일시 휴직’이라고 응답한 것은 경제활동이 취업으로 변한 것으로 재코딩하여 자료를 정리하였다. 3년 동안 한번 변동을 경험한 이가 조사 대상 전체 근로자의 31.4%이고 2회 변동도 13.5%에 이른다.

3년에 걸친 조사 전체 관측 수에서 재취업이라고 응답한 수가 39.8%로 가장 많았고 원직장 복귀라고 응답한 수는 32.2%였다. 미취업에 응답한 수도 22.8%에 이른다. 세 차례의 조사 중 한 번이라도 원직장 복귀를 경험한 사람은 1,668명 중 615명, 36.9%이고 재취업에 한 번이라도 응답한 사람은 859명, 51.5%였다. 미취업을 한 번 이상 경험한 이도 616명, 36.9%에 이른다. 일자리 유형에서 상대빈도는(Within)는 조사 기간 중 한 번이라도 해당 항목에 응답한 관측 수의 비중을 보여준다(민인식·최필선, 2013: 57). 원직장 복귀에 응답한 관측 수의 비중은 전체 관측 수의 87.3%, 재취업은 77.2%, 비임금근로 재취업자는 69.6%, 미취업 응답한 수의 비중은 전체 관측 수의 61.8%에 이른다.

〈표 5〉 3년간 경제활동 변동 횟수와 조사기간 전체 경제활동 형태

구분		빈도		%	
일자리 변동 횟수 (2013년-2015년)	변동 없음	802		55.1	
	1회 변동	457		31.4	
	2회 변동	197		13.5	
	합계	1,456		100.0	
구분 (N=1668)	Overall		Between		Within
	빈도	%	빈도	%	빈도
원직장 복귀	1,611	32.2	615	36.9	87.3
재취업	1,990	39.8	859	51.5	77.2
비임금근로 재취업	261	5.2	125	7.5	69.6
미취업	1,142	22.8	616	36.9	61.8
합계	5,004	100.0	2,215	132.8	75.3

시간의 변화에 따른 경제활동형태 변동의 특성을 보다 세부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분석결과는 〈표 6〉과 같다. 먼저 조사 1차년도에서 3차년도 간 고용형태 변화를 보기 위해 각 년도 이행 확률을 두 줄로 표시하였는데, 각 셀의 첫 번째 줄은 1차년도(2013년) 고용형태가 3차년도(2015년)에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주며, 두 번째 줄은 3차년도 해당 고용형태에 있는 사람들이 1차년도 당시 어떤 고용형태로부터 왔는가를 보여준다.

<표 6> 1차와 3차 간 경제활동형태 변화

(단위: %)

구분		3차년도 (2015년)				
		원직장 복귀	재취업	비임금근로 재취업	미취업	합계
1차년도 (2013년)	원직장 복귀	80.2	12.9	2.0	4.9	100.0
		96.7	10.1	11.7	9.0	35.4
	재취업	.6	86.8	3.2	9.4	100.0
		.6	60.6	16.5	15.1	31.4
	비임금근로 재취업	0	19.4	79.0	1.6	100.0
		0	1.6	47.6	.3	3.7
	미취업	2.6	42.4	5.1	49.9	100.0
		2.7	27.7	24.3	75.6	29.4
	합계	29.4	45.0	6.2	19.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2차년도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1차→3차 이동을 분석한 것임

요양 종료 후 원직장으로 복귀한 이들은 2년이 지난 후 원직장에서 취업을 유지하고 있는 비율이 80.2%, 다른 직장으로 옮겨 일하는 재취업이 12.9%가 되었고 미취업자 된 경우도 4.9%였다. 재취업자가 재취업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비중이 79.0%인데 미취업으로도 9.4%가 이동한 것을 알 수 있다. 1차년도 미취업자는 3차년도에 그대로 미취업인 이들의 비중이 절반에 이른다. 미취업자였던 이가 재취업으로 옮긴 비중이 42.4%인 것도 유의할 부분이다. 3차년도에 원직장 복귀로 응답한 근로자 중에서 1차년도에 원직장에 복귀된 이가 96.7%를 차지하고 있다. 다른 경제활동 형태에서 다시 원직장 복귀로 이동하는 비중은 매우 낮다는 의미이다. 미취업에서는 3차년도 미취업자의 75.6%가 1차년도의 미취업자였음을 보여주는데 이를 통해 1차년도의 일자리 진입형태가 이후 경제활동 형태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표 7>은 경제활동형태의 전이확률(transition probability)이다. 전이확률은 조사 전체 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어떤 특징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데, 현재 상태가 다음 기의 어떤 상태가 될 확률을 의미한다.⁴⁾

현재 원직장 복귀자가 다음 기에도 원직장을 유지할 확률은 88.1%(987/1121)였고, 재취업자가 재취업을 유지할 확률은 88.9%이다. 원직장 복귀자도 미취업자가 될 확률이 4.1%, 재취업자도 미취업자가 될 확률이 9.0%임을 알 수 있다. 미취업자가 다음 기에도 미취업자가 될 확률은 60.0%에 이른다. 3년 동안 경제활동형태 변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산재근로자가 원하는 경제활동 형태로 진입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들 경제활동 형태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요양종료 후 첫 번째 경제활동 형태가 매우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처음 경제활동형태가 그대로 지속될 확률이 높은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4) 위에서 계산된 (조건부) 전이확률은 연속된 두 기간 동안 값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추적하여 계산된다(민인식·최필선, 2013: 59). 명령어 xtrans를 사용하였다.

〈표 7〉 경제활동형태 전이 확률

(단위: 명, %)

구분		경제활동 형태 (t+1)				
		원직장 복귀	재취업	비임금근로 재취업	미취업	합계
경제 활동 형태 (t)	원직장 복귀	987	75	13	46	1,121
		88.1	6.7	1.2	4.1	100.0
	재취업	7	1,101	20	111	1,239
		.6	88.9	1.6	9.0	100.0
	비임금근로 재취업	2	18	135	3	158
		1.3	11.4	85.4	1.9	100.0
	미취업	24	272	31	491	818
		2.9	33.3	3.8	60.0	100.0
	합계	1,020	1,466	199	651	3,336
		30.6	43.9	6.0	19.5	100.0

3)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이행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경제활동형태 변화 즉 산업재해근로자의 노동시장이행에 관심을 가지는 본 연구는 어떤 요인들이 경제활동형태 변화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경제활동형태는 비순서형 범주 변수이므로 횡단면다항로지분분석을 활용하였다. 각 개인이 특정 선택을 할 때 그 선택확률이 의사결정자인 개인 특성(individual-specific)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본다(민인식·최필선, 2015: 185).⁵⁾ 종속변수 범주 중 재취업을 기준 범주로 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먼저 재취업과 비교하여 원직장 복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연령, 학력, 요양기간, 현재 업무수행능력, 산재 전 직장규모, 근무기간, 종사상 지위 중 임시직, 일용직 그리고 최종직업훈련 횟수였다. 남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연수가 많을수록, 현재 업무수행능력이 좋을수록 원직장 복귀가 될 확률이 높다. 산재 전 직장 요인인 직장규모가 클수록, 산재 전 근무기간이 길수록 원직장으로 복귀할 확률이 높다. 산업재해 이전의 종사상 지위로 임시직과 일용직은 원직장 복귀 확률이 낮다. 최종직업훈련 횟수도 원직장 복귀를 선택할 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직장규모가 작을수록 직장 복귀율이 낮다는 선행연구(정원미 외, 2003) 결과 및 연령, 성별, 요양기간 등이 재취업에 비해 원직장 복귀 확률이 높다는 연구와(양재성 외, 2012) 동일한 결과이다.

재취업에 비해 비임금근로 재취업(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을 선택하게 될 영향 요인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성별, 연령, 현재업무수행능력, 산재 전 직장에서의 근로기간이었다. 남성일수록

5) 횡단면 다항로지분모형 추정을 위해 mlogit 명령어를(민인식·최필선, 2015: 190) 사용하였다. 종속 변수 범주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는 재취업을 기준범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미취업 등을 기준범주로 할 수 있으나 연구대상자가 산업재해근로자라는 측면에서 취업, 미취업 대비보다는 재취업을 기준으로 원직장 복귀, 미취업 등을 비교하는 것에 의의를 두어 기준변수로 재취업을 사용하였다.

비임금근로 재취업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비임금근로 재취업을 택할 확률은 낮아진다. 현재 업무수행능력은 부적 영향요인으로 수행능력이 높을수록 비임금근로 재취업을 선택할 확률은 낮아진다. 산재 전 근로기간이 길수록 자영업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 재취업 대비 원직장 복귀 선택 확률, 재취업 대비 비임금근로 재취업을 선택할 확률에서 각종 재활서비스 이용 경험은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지 않았다.

<표 8> 경제활동형태 영향 요인(횡단면다항로지분석)

구분		재취업 vs. 원직장복귀		재취업 vs. 비임금근로재취업		재취업 vs. 미취업	
		Coef.	Std. Err (p) z	Coef.	Std. Err (p) z	Coef.	Std. Err (p) z
인구 사회학적 요인	성별 (남성=1)	.2298	.1087 (.035)	.5106	.2159 (0.018)	-.5283	.1072 (0.000)
	연령	.0087	.0043 (.045)	-.0170	.0075 (0.023)	.0318	.0048 (0.000)
	교육연수	.0450	.0156 (.004)	-.0695	.0253 (0.006)	-.0075	.0150 (0.614)
	장애등급	-.0029	.0079 (.715)	-.0252	.0134 (0.058)	-.0308	.0090 (0.001)
	요양기간	-.1650	.0399 (.000)	-.1320	.0680 (0.052)	.2622	.0367 (0.000)
	현재 직무수행 능력	.0718	.0209 (.001)	-.0930	.0323 (0.004)	-.2865	.0188 (0.000)
산재 전 직장 요인	전체 근로자 수	.0580	.0239 (.015)	-.0236	.0435 (0.587)	-.0186	.0268 (0.487)
	근로기간	.2014	.0111 (.000)	.0698	.0199 (0.000)	.0331	.0124 (0.008)
	종사상 지위, 임시직	-1.1042	.1310 (.000)	-.3929	.2212 (0.076)	-.0455	.1215 (0.708)
	종사상 지위, 일용직	-.9241	.1167 (.000)	-.1296	.1810 (0.474)	-.2023	.1078 (0.061)
산재 보상 서비스 이용	재활서비스 이용	-.0642	.1034 (.534)	.0364	.1802 (0.840)	.1257	.1045 (0.229)
	직업재활서비스 이용	.2255	.1295 (.082)	-.0884	.2181 (0.685)	.2998	.1240 (0.016)
	사회심리재활서비스 이용	-.0967	.1157 (.403)	.3440	.1914 (0.072)	-.0675	.1114 (0.545)
	최종직업훈련횟수	-.6370	.1157 (.000)	-.0418	.1595 (0.793)	.0553	.0915 (0.546)
_cons		-2.4894	.4075 (.000)	.1028	.6730 (0.879)	-.4756	.4107 (0.255)
Log likelihood = -4975.8681				Number of obs = 5,004 Lr chi2(45) = 2286.22 Prob > chi2 = 0.0000 Pseudo R2 = 0.1868			

재취업 대비 미취업을 선택할 확률에 유의미한 영향 요인은 성별, 연령, 장애등급, 요양기간, 현재 업무수행능력, 산재 전 근로기간, 직업재활서비스 이용 경험이었다. 남성일수록, 장애등급이 높을수록(장애정도가 경할수록), 현재 업무 수행능력이 높을수록 미취업 선택 확률이 낮다. 연령이 높을수록, 요양기간이 길수록, 산재 전 근로기간이 길수록 미취업을 선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분석 대상이 된 패널데이터는 시간에 따라 변수 값이 변하는 것을 반영한 것이기에 직업재활서비스를 이용한 이들이 재취업보다는 미취업될 확률이 높게 나온 결과로 직업재활서비스의 실효성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관계성을 더 살펴보기 위해 직업재활서비스 이용 여부와 직업훈련 요인의 경제활동형태 선택에 대한 가설을 검정하였다. 직업재활서비스와 직업훈련횟수는 경제활동형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그리고 직업훈련 횟수에 따른 각 경제활동형태 선택확률을⁶⁾ 보여주는 <표9>를 보면 다른 조건이 평균에 있을 때 직업훈련횟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미취업, 재취업을 선택할 확률은 증가하는 데 비해 원직장 복귀를 선택할 확률은 오히려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원직장에 복귀하지 못하거나 미취업일 경우 추가적인 직업훈련을 하는 것이고, 직업훈련횟수가 경제활동형태 중 재취업에는 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추론을 뒷받침한다.

<표 9> 직업훈련횟수에 따른 경제활동형태 선택확률

구분		미취업		재취업		원직장복귀	
		Margin	Std. Err (p> z)	Margin	Std. Err (p> z)	Margin	Std. Err (p> z)
최종 직업 훈련 횟수	1	.1985	.0072(.000)	.4522	.0090(.000)	.2885	.0085(0.000)
	2	.2402	.0163(.000)	.5182	.0200(.000)	.1750	.0178(0.000)
	3	.2733	.0338(.000)	.5584	.0337(.000)	.0998	.0219(.000)
	4	.2990	.0539(.000)	.5785	.0571(.000)	.0547	.0189(0.004)
	5	.3196	.0753(.000)	.5856	.0780(.000)	.0293	.0139(0.036)
	6	.3371	.0976(.001)	.5850	.0997(.000)	.0155	.0093(.099)

경제활동형태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성별, 연령, 학력 등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전반적으로 재취업보다는 원직장 복귀에, 비임금근로재취업보다는 재취업으로, 미취업 보다는 재취업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전 직장요인은 원직장 복귀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여주는 데 비해 산재보상서비스는 경제활동형태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거의 없다. 그중에서도 산재 전 근로조건이 열악한 근로자일수록 원직장 복귀가 어렵다는 분석결과를 볼 때 산재근로자를 장애등급, 요양기간 등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산재 전 직장 환경과 종사상 지위 등을 고려한 직업복귀 전략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산재근로자는 임금근로 즉, 원직장 복귀나 재취업을 선호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라는 측면에서 원

6) 횡단면 다항로짓모형에서 교차방정식 가설검정을 위해 명령어 test를, 각 범주에 대한 선택확률을 계산하기 위해 margins를 사용하였다(민인식·최필선, 2015 :198).

직장 복귀와 재취업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재활서비스를 포함한 산재보상서비스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대안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세 차례에 걸친 산재패널조사에 모두 응답한 산재근로자 1,668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본 연구는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노동시장이행을 기술하고 경제활동형태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재근로자의 요양종료 후 첫 경제활동형태는 원직장 복귀 35.4%, 재취업 31.4%, 미취업 29.4%였다. 3년 기간 동안 경제활동형태의 변화가 1회 있었던 이가 전체 근로자의 31.4%, 2회 변동을 경험한 이는 13.5%였다. 세 차례의 조사 중 한 번이라도 원직장 복귀를 경험한 사람은 1,668명 중 615명, 36.9%이고 조사기간 중 재취업에 한 번 이상 응답한 사람은 859명, 51.5%였다. 미취업을 한 번 이상 경험한 이도 616명, 36.9%에 이른다.

둘째, 경제활동형태의 전이확률을 보면 현재 원직장 복귀자가 다음 기에도 원직장 유지할 확률은 88.1%, 재취업자가 재취업을 유지할 확률은 88.9%였다. 원직장 복귀자도 미취업자가 될 확률이 4.1%, 재취업자도 미취업자가 될 확률이 9.0%, 미취업자가 다음 기에도 미취업자가 될 확률은 60.0%에 이른다.

셋째, 경제활동형태 변화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찾기 위한 분석에서 재취업 대비 원직장 복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연령, 학력, 요양기간, 현재 업무수행능력, 산재 전 직장규모, 근무기간, 종사상 지위 중 임시직, 일용직 그리고 최종직업훈련 횟수였다. 재취업 대비 미취업을 선택할 확률에 유의미한 영향 요인은 성별, 연령, 장애등급, 요양기간, 현재 업무수행능력, 산재 전 근로기간, 직업재활서비스 이용 경험이었다. 남성일수록, 장애등급이 높을수록(장애정도가 경할수록), 현재 업무 수행능력이 높을수록 미취업 선택 확률이 낮다. 연령이 높을수록, 요양기간이 길수록, 산재 전 근로기간이 길수록 미취업을 선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업훈련횟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미취업, 재취업을 선택할 확률은 증가하는 데 비해 원직장 복귀를 선택할 확률은 오히려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이행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논의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재해근로자에 대한 노동시장이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요양종료 후에 단기가 아닌 장기적인 계획 하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산재근로자들은 산재 후 첫 일자리 복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이후 경제활동형태 유지와 변화에 결정적 요소가 되었다. 따라서 산업재해근로자가 일반 근로자보다 취약성이 커진 것을 고려하면서 요양종료 후 실업을 최대한 막아야 하며, 일자리로 돌아올 때 '취업'에만 의미를 부여할 것이 아니라 향후 고용 불안정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 진입을 위해 정부가 정책적 의지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3년여의 시간 동안 경제활동형태 변화를 경험하는 근로자가 적지 않았다. 요양 종료 후 직장 복귀, 일자리 변경, 미취업자가 되는 등의 변화가 계속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장기적인 계획하에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둘째, 산업재해근로자의 직장복귀와 사회복귀에 필수적인 재활서비스 내용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이용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재활서비스 이용경험자 비중이 낮은 점을 개선하고 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와 산재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것과의 거리를 좁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자리 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이 있었지만 대표적인 산재보상서비스인 재활서비스 이용경험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지 않았다는 점을 볼 때 기존의 재활서비스와 일자리 복귀를 위한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 성별, 연령, 요양기간, 산재 전 직장 요인들이 경제활동형태에 유의미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기에 산업재해 근로자의 개인 특성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근로자의 개별 유형에 맞춘 적절한 재활 개입을 위해서는 산재근로자를 더 효과적으로 범주화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MacEachen 외(2013: 2174)는 근로자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직업훈련에 참여시키기 위한 전제라고 했는데 이를 근거로 근로자를 이해하는 지원제도의 원리를 확대시켜 추론하면, 산업재해근로자의 원활한 일자리 복귀를 위해서는 산업재해 이전에 처한 환경, 예를 들어 산재 전 직장의 규모, 직종, 재해 당시 고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에 따라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산재 이전 취업경험, 연령, 장애 정도 등 개인별 특성에 부합하는 재활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셋째, 일자리를 옮기거나 미취업에서 취업으로 이동하는 것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포함한 직업재활서비스를 개선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직업재활서비스를 이용할수록 재취업에 비해 미취업일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직업훈련 총 횟수는 원직장 복귀에 부적인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것을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직업재활서비스가 일자리 복귀에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직업재활서비스의 핵심인 직업훈련이 원직장 복귀에 대한 영향력이 없고 재취업에만 일정 부분 기여한다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직업훈련을 모든 대상에게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실질적인 일자리 복귀에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고용환경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업훈련은 비숙련 근로자에게는 고용기회를 증가시킬 수 있으나 일정 정도 이상의 숙련 근로자에게는 직업훈련 자체가 고용기회를 확대시키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직업훈련 내용을 다양화하고 고용가능성 혹은 노동시장이행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전략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배화숙, 2015: 102).

그리고 제직상태에 비해 숙련을 증진시키는 장기간 훈련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이들 즉 실업, 비경제활동을 거쳐 비저소득으로 이행하는 이들에게만 직업훈련이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데(성재민, 2011: 186), 이것은 직업훈련이 효과를 낼 수 있을 정도의 절대적인 시간을 가진 근로자에게만 노동시장이행에서 직업훈련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를 산재근로자에게 적용한다면, 요양종료 후 일자리 재진입 전 충분한 교육 훈련 환경을 확보하고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 내용으로 운영하는 것이 직업교육과 훈련의 효과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직업재활 시설이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전직을 위한 다양한 직업훈련 분야가 있

는데, 직업훈련 분야를 장래 취업 가능 직종과 산재장애인의 신체적성과 연계시켜 지도하고 있다고 (박석돈, 2011: 13-14) 한다. 그리고 보편적 근로생애를 보장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과 관련한 연구(이예린, 2014)에서 제 1의 길로 유형화한 ‘직업훈련과 실업급여의 조합’의 유용성을 일자리 복귀를 원하는 산재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를 둘러싸고 있는 기본적 사회보험제도의 개선과 함께 산재근로자 개인 특성을 고려하여 재활에서 가장 중요한 직업복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 서비스 개발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3차까지 조사된 산재보험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산재근로자의 일자리 복귀와 경제활동형태의 변화를 중단적 분석을 통해 기술하고 변화의 성격과 영향요인을 규명한 것은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지만,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이행을 3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의 변화만 다룰 수밖에 없었다는 것과 이미 조사된 자료를 활용함에 따른 제한된 분석을 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후 조사자료가 축적되는 과정에서 산업재해근로자의 노동시장이행을 추적하고 분석하기 위해 고정효과모형 활용 등 중단연구의 특성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각 조사시점의 경제활동 형태를 종속변수로 두어 선행된 경제활동형태가 후속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이행자료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를 통하여 산업재해근로자의 노동시장이행 성격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추후과제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원활한 노동시장이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상황과 사회보장제도 및 서비스의 기능을 충분히 적용한 연구 등을 후속 연구로 제안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2016, “산업재해율”, <http://www.moel.go.kr>
- 근로복지공단, 2016, 『2016 근로복지공단 한·영 사업안내서』
- 김선미·김은하, 2015,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심리사회적 요인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6(4): 389-411.
- 김지혜 역, 2015, 『사회보장론 입문』, Pieters, Danny, Social Security: An Introduction to the Basic Principles, 2006, 서울: 사회평론.
- 도성화, 2014, “산재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서비스 지원 방략”,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7(2): 249-269.
- 민인식·최필선, 2013, 『패널데이터 분석』, 서울: 지필미디어.
, 2015, 『고급 패널데이터 분석』, 서울: 지필미디어.
- 박석돈, 2011, “독일의 산재장애인 직업재활과정과 우리나라 산재장애인 직업재활 발전방향”, 『재활과학연구』, 29(1): 37-54.
- 박수경, 2012, “산재장애인의 성공적인 직업복귀 과정과 관련 요인”, 『재활복지』, 16(3): 293-318.
- 박은주, 2014, “산재근로자의 재해 이후 취업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보장연구』, 30(2): 191-220.
- 배화숙, 2014, “산업재해 근로자의 노동시장이행 관련 요인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5(12): 7093-7100.
, 2015, “산업재해 후 실직·비경제활동인구의 욕구분석과 노동시장이행서비스 개선방안”, 『직업재활연구』, 25(2): 87-105.
- 석상훈, 2008, “저임금 근로의 동태적 분석 : 상태의존성 검증”, 『산업경제연구』, 21(2): 691-709.
- 성재민, 2011, “저소득자 노동시장 지위 변화에 대한 동태적 분석”, 『사회보장연구』, 27(4): 165-189.
- 신혜리·김명일, 2015, “산재근로자들의 재활서비스경험이 직장복귀 및 원직장복귀에 미치는 효과: 성향점수매칭(PSM)을 중심으로”, 『직업재활연구』, 25(1): 105-130.
- 심현진·이현실, 2016, “산재보험 재활사업 프로그램 질적 정보격차가 직무와 일상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의 매개효과 검증”,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10(1): 143-154.
- 양재성·오순복·임성수, 2012, “산재근로자 직업복귀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분석-요양종결 후 장애판정자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8(3): 153-177.
- 이상진, 2010, “우리나라 산재장애인 직장복귀정책 강화방안”, 『직업재활연구』, 29(3): 1-34.
- 이승욱·박혜전, 2007,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 『직업재활연구』, 17(1): 69-99.
- 이예린, 2015, “보편적 근로생애를 위한 복지국가의 노동시장 조건: 이행노동시장이론을 적용한 OECD 14개국 비교연구”, 『사회보장연구』, 31(1): 137-168.
- 정병석, 2010, “한국 노동시장정책의 평가와 발전방안 : 이행노동시장 이론의 활용”, 『노동정책 연구』, 10(2): 155-185.
- 정원미·박정일·구정환·노영만, 2003, “산업재해 근로자의 직장복귀 예측요인”, 『대한직업환경의학회지』, 15(2): 119-131.
- 조성재·이승욱·송창근·박유진, 2015, “산재근로자와 사업주의 산재보험 재활서비스 욕구조사: 근로

- 복지공단 재활서비스를 중심으로”, 『직업재활연구』 25(1): 85-103.
- 최윤영, 2009, “산재근로자 재활서비스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직업재활연구』, 19(1): 121-142.
- Gross, D. P., J. Zhang, I. Steenstra, and Barnsley, 2013, “Development of a computer-based clinical decision support tool for selecting appropriate rehabilitation interventions for injured workers”, *Journal of Occupational Rehabilitation*, 23(4): 597-609.
- MacEachen, E., A. Kosny, S. Ferrier and K. Lippel, 2012, “The ‘ability’ paradigm in vocational rehabilitation: Challenges in an Ontario Injured Worker Retraining Program”, *Journal of Occupational Rehabilitation*, 22(1): 105-117.
- MacEachen, E., A. Kosny, S. Ferrier and K. Lippel, 2013, “The ideal of consumer choice in social services: Challenges with implementation in an Ontario injured worker vocational retraining programme”,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35(25): 2171-2179.
- Schmid, G., 2006, “Social risk management through transitional labor markets”, *Social-Economic Review*, 4: 1-33.
- Sears, Jeanne M., Thomas M. Wickizer, and Beryl A. Schulman, 2014. “Injured Workers’ assessment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before and after retraining”, *Journal of Rehabilitation*, 24: 458-468.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Labor Market Transition and Factors Influencing Labor Market Transition of Injured Workers

Bae, Hwa Sook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This study is purposed to explain the characteristics of injured workers' labor market situation and to analyze the factors influencing labor market transition of those workers. Using the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Panel Data ver.1~3 which was surveyed by the Korean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in 2013-2015, this study analyzed 1,668 injured worker cases. The study shows that workers who have experience job retention at least once are 36.8% of all, 51.5% of them have experienced re-employment, and 36.9% have done unemployment. One result of the longitudinal analysis is that socio-demographic factors including gender, age, education years, convalescence period, ability on job performance, company size, term of service, temporary employment, daily-workers status before job accident and job training were associated with return to pre-injury job. The other result is that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the probability to be the unemployed are gender, age, levels of disability, convalescence, ability on job performance, term of service before job accident, job rehabilitation service utilization.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we need to develop efficient intervention programs for supporting return-to-work and labor market transition of injured workers.

key words : injured workers, labor market transition, return to work, rehabilitation service, job training program

[논문 접수일 : 17. 03. 30, 심사일 : 17. 04. 12, 게재 확정일 : 17. 06. 12]